

국민의힘, ‘힘지’ 후보 고르기 고심

63개 지역구, 공천방식 조차 못 정해
서울·수도권 일부 후보 아예 없기도
당내 ‘국민추천제’ 추진 방안 고려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을 절반 가량 완성한 가운데,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일부 지역구를 두고 고심 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중 133곳(52.5%)의 후보를 확정했다. 그리고 남은 120개 지역구 중 63개 지역구가 공천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보류 지역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힘지라 공천 신청자조차도 없는 곳이거나, ‘뒷발’인 대구·경북(TK)의 일부 지역 또는 서울 강남갑·을·병 서초을 등이다. ‘뒷발’ 지역구의 경우엔 현역 교체로 인한 반발을 고려해, 발표를 늦추는 모양새다.

반면 당세가 약한 ‘힘지’는 후보가 없어서 고심 중이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후보가 아예 없거나 재공모를 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노원갑·을·병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원을은 공천 신청자가 없었고, 갑·병은 공천 신청자가 있음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중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서을도 아직 후보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곳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컷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프(공천배제)됐고, 또 다른 예비후보였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도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공관위는 강서을에 박마루장에 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후보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이곳은 28개 지역구 중 14곳에서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구는 10곳이나 된다.

이 때문에 당에서는 ‘국민추천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참신하고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함이다. 또 이는 ‘현역 불패’, ‘무음 공천’ 등의 논란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원하

시는 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전례를 보면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라며 “그런 지역에서의 공천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당의 공천이 조금 더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그리고 몇개, 어느 지역구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여지를 뒀다.

한편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경우 공천 발표는 자연스럽게 미뤄질 전망이다. 여러 후보를 추천받고 이 가운데서 당이 적합도를 평가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적으로 확충할 것”

與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
기후대응기금 5兆로 늘려

국민의힘은 27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차세대원전인 소형 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과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부에서 주장하듯 재생에너지만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 위원장도 직접 참석해 공약을 배송했다. 성동구는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정말 인류의 심각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 생각한다”며 “위험받은 정치권력은 꼭 당장의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 같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

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접근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는 “완전 재생에너지로만 가서는 우리 사회의 단기적, 중기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지금의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스타트업 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이끌고,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영역은 정부 주도만 해선 한계가 있고,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의 기후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조4000억원(올해 기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경기도 용인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시스

임종석 공천배제·최고위원 사퇴 등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민정〉

민주당, 거듭되는 혼란에 ‘적신호’

중구 성동구갑에 전현희 전략공천
고 “문제지적에 물러나라 답변 들어”
비명계 박영순 의원, 새로운미래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제외,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 비이재명계 의원의 탈당이 하루 안에 벌어지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친이재명계 후보 공천과 친문재인계 후보 공천을 두고 당내 이견차가 과열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자신이 재선을 했던 지역구 재탈환을 노리던 임 전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제외됐다.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임 전 실장은 당이 제안한 송과갑 공천도 거부하면서 중구성동구갑 재탈환에 의지를 보였으나, 전략공관위는 전 전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날(26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당무 거부’를

한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했다. 고 최고위원은 “하위 20%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우리 진영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 민주당 중진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 의원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고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안에 들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탈당하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김종민 공동대표와 박영순 의원으로 2명이 됐다.

앞서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5선의 설훈 의원을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와 현안 토론회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당초 정권심판론이 압도적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열기가 높았던 시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설날을 전후해 당에 상당히 경고등이 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라고 당의 단합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개혁신당 “韓 희망,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 공약
“반도체 살리면 대한민국도 살아”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이 27일 “반도체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반도체를 살리면 대한민국도 산다”며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을 총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오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서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의 성공을 위해 ▲22대 국회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연결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 시설 설립을 약속했다.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을 대표발의 통과시킨 바 있는 양 원내대표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며 “또 첨단 산업 시설, 연구 투자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고, 인접 지역에 지자체 교부금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경기 남부권 전체가 ‘용인 특화단지 효

과’를 누리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기흥, 서쪽으로는 동탄, 동쪽으로는 원삼면과 이천, 남쪽으로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교통망을 연결시키겠다”면서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잇고, 용인을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을이 지역구인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더 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가스, 전기, 용수만이 아니라 도로 및 철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2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10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